

문명개화와 전쟁, 그리고 한국학

박태균(Taegyun Park),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1.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통한 ‘문명개화’

문명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일본의 메이지 시기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서구에 맞서 부국강병을 해야 하지만, 그 방안은 서구의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구를 모방함으로써 탈아입구를 통해 또 다른 서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서구의 힘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적 슬로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명개화는 당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중국 중심적 전통적인 유교적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서구적인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서구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이 동아시아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개화에 성공하고 전쟁을 통해 청과 러시아에 승리하면서 세계적인 강대국의 하나로 일어난 일본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동아시아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문명의 과정은 시기에 따라서 개화, 서구화, 근대화, 자본주의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명은 물질적, 경제적으로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를 쫓아가고, 그를 통해서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의미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수단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이후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던 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진출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성장은 중요한 위기였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서구적, 또는 일본적인 근대화의 과정에서 성공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일본의 대륙 진출은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갔고, 거기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본 방식의 문명개화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자책이 있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통한 일본의 전쟁특수는 또 다른 방식의 문명개화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의 배후지로서 효율적으로 물질적, 경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등이 모두 일본이 직접 개

입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본토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쟁특수의 전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전쟁특수를 통한 문명화는 다시 196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전쟁을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참전을 거부한 가운데 베트남에 미군과 함께 파병했던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 그리고 미군의 전쟁물자기지과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했던 일본과 타이완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례적으로 급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모든 문명과 문화를 파괴할 수 있는 전쟁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직접 일어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스스로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한국 내에서 파병을 둘러싼 논의를 돌아보면 이러한 신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진출,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이라는 오아시스가 한국의 신문지상과 국회를 통해 거침없이 노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문명의 파괴과정으로서의 문명개화의 확산

전쟁을 통한, 또는 전쟁특수를 통한 문명개화, 그리고 물질적, 경제적 성장의 과정은 다른 지역에서 문명의 파괴를 가져왔다. 19세기 이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만주사변은 한반도의 일부와 중국 동북부 지역을 주무대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과정은 일본의 성장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에 있었던 문명의 파괴과정이었다. 물론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문명개화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되는 문명이 서구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괴의 과정이 문명의 파괴가 아니라 문명개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문명 파괴의 과정을 더 잘 보여준다. 외부로부터 전쟁에 참전하거나 관여한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전쟁터가 되었던 지역에 있었던 문명은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박물관에서 약탈과 파괴가 일어나는 장면을 뉴스로부터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이라크 전쟁은 한 지역에서 물질적 경제적 번영이 다른 지역에서 수천년 간 계속되어 온 문명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과정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문명 역시 전쟁과정을 통한 물질문명의 성장을 통해 파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확산된 전체주의 정권의 강화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71년 태국에서의 쿠데타, 1972년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친위 쿠데타는 물질문명의 발전과정에 조응하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문명, 즉 민주주의의 파괴과정을 보여준다. 베트남 전쟁을 통한 전쟁특수는 이들 국가에서 경제적 성장을 통한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산을 가져왔고, 베트남 전쟁에 지친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이들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력을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출현했다.

전체주의의 출현은 근대 문명이 낳은 최고의 정치시스템이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았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변화가 정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개발독재라는 이름 하에 합리화되었다. 자본주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에 의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독재는 1945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확산되었고,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되었다.

개발독재의 과정은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파괴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1970년대 개발독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1965년 거대한 학살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다. 1947년의 타이완, 1948년의 제주, 그리고 1980년의 광주와 함께 냉전 시대에 있었던 가장 잔인했던 학살과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개발독재가 출현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을 철저히 짓밟혔다. 필리핀과 한국은 인권 외교를 선언했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1986년과 1987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권문제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개발독재에 대한 향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낙인찍히고, 과거 개발독재 시대를 통한 효율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희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고, 태국에서 경제적 문제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탁신 정부가 수립되었다. 개발독재와의 형태와는 달랐던 탁신 정부는 이후 10여년 동안 태국에서 정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냈지만, 태국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탁신 정부에 대한 지지가 식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푸틴과 같은 또 다른 개발독재를 추진하는 정부의 탄생, 그리고 스탈린이나 장경국, 피노체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성찰의 부족

한국학은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다. 과거 미국의 AAS에서 한국학은 변방의 분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AAS의 가장 중요한 세션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보편적인 아시아학을 다루는 roundtable에는 한국학 관련 분야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session의 수에서도 중국, 일본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수준에서도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는 식민지 시기이다. 이는 과거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불리어 졌던 분야였지만, 현재에는 식민지의 유산 또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으로 분류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 아시아학의 유산, 그리고 유럽 중심의 아시아학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연구 역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유산이 아시아에 녹아 있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독립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던 한국에서의 식민지 시기 연구에 비하여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학 연구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어떻게 문명개화가 확산되었으며, 그 문명개화가 갖고 있는 성격과 특징을 밝히려 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이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서구에서의 아시아학 연구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시민사회, 민주화, 그리고 한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학 연구의 주류가 되지는 않고 있다. 2008년과 2016년의 촛불 항쟁이 그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학문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관련 프로젝트들의 주제는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성장으로부터 한반도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경제정책, 가버넌스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학의 확산에 따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그룹의 학문적 수준 등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에 그대로 멈추어져 있다. 이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개입하여 전쟁특수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이러한 정체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내에서 성찰의 부족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세기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그 주위에서 일어난 전쟁,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연루되었다. 그러한 전쟁들은 전쟁 그 자체로 볼 때도 성공적인 전쟁이 아니었고, 전쟁의 성격을 볼 때 정의의 전쟁도 아니었다. 19세기 이후의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그 막을 내렸다.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함께 참여했던 한국 역시 그러한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았다.

소수의 한국인이기는 했지만, 일본의 대동아전쟁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5년 남베트남 정부의 몰락을 앞두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성명은 전쟁에서의 실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성찰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이 그 동안 내세운 것은 그 전쟁으로부터 돈을 벌고 문명화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앞당겼다는 것이었다. 국내의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개발독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이 냉전체제의 도움을 받았으며, 1970년과 1980년, 그리고 1997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국가부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점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독재에 대해 설명할 때 관료주의를 통해 뒷받침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탄압, 1인 중심체제가 되어가면서 무너져간 관료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류에 대한 설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한류에 대한 설명은 한국 내부의 역동성에 기반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주화 이후의 창의성과 문화개방,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내재했던 외부적 영향, 즉 헐리우드, 홍콩 느와르, 일본 대중문화 등의 영향은 거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도 한국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재해 있는 ‘한국적인 것이야말로’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한류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급속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성찰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장이나 성공의 결과에 매몰되어 그 과정에서 있어야 했던 성찰의 과정을 생략했던 것이다. 성찰의 결여는 학문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어쩌면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한국학의 내용은 성장의 가정과 함께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찰해 나갔는가의 과정일 것이다. 민주화가 중요하다면, 이와 함께 민주화가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었는가가 한국학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편화와 도약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보편화 과정을 통해 지역학 연구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보편화의 정도는 한국학 연구에 가장 큰 약점으로 남아 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지역학 연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지역학은 일본과 중국,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문명개화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통해 한국학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한국과 유사한 보편성을 갖는 나라들, 즉 빛나는 전통문명을 갖고 있었던 지역,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경험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냉전 시기에 피해자가 되었던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학 연구가 시급하다. 동남아시아만 예를 들 때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과 차이점, 1970년대 이후 한국과 필리핀, 타이완, 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국학 연구가 보편적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시각과 주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가 문명의 성장과 그 부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극복과정을 통해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학이 단지 중국학과 일본학의 하위 학문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내는 분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명개화의 측면을 정치적, 문화적, 시민사회적 측면으로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한국현대사의 과정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30여년이 되어가는 한국학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의 지역학, 한국학과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한국학의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